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2010. 12. 1 규정 제127호]

일부개정 2011. 9. 23. 규정 제133호

일부개정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2조(위촉 등) ①원장은 3명 이내의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연구원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출판 등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

3. 연구원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형사(고소 등을 말한다)사건 및 민사 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를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을 말한다)사건 또는 민사사건으로써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관련부서장의 지원신청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후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는 총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여 해당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등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해당직원의 과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변호활동비 반납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⑥위원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여 직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금액, 합의금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제4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확정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송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장의 결정에 따라 관련법이 정한 소송비용 미납시 조치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신설 2022.7.4.)

제4조의3(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연구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사안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비용 회수 포기여부를 사전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7.4.)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행정지원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에 의거 지급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2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 약 서

경기연구원 직원 ○○○(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경기연구원 직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사건)에서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법원 판결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연구원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중 위원회에서 환수 결정된 변호사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비용 일체를 경기연구원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경기연구원은 추후 본인의 법원 판결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수 있고, 본인은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경기연구원 직원

(인)

경기연구원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 퇴 년월일	의 퇴 내 용	회 신 년월일	회 시 내 용	비고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 타						